

‘한반도 비핵화’에 중점 대북 제재 단계적 완화 평화체제로 논의 넓힐 듯

남북정상회담 다음 의제 청와대 “본질적 문제 논의” 경제협력 등은 일단 빠져 비핵화 점점 찾으면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 모색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다음 달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비핵화 문제에서 남북 정상이 점점을 찾는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같은 주제로 자연스럽게 논의가 파생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는 이번 회담이 단순히 남북 차원의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차원을 넘어 문 대통령이 중대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신(新) 베를린 선언’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완전한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 베를린 선언에 나와 있던 문 대통령의 공적 목표는 국제사회와 함께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더 밝은 미래’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핵 폐기에 이를 때까지 여러 단계에서 북핵 문제 당사국이 서로 취해야 할 단계별 행동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해법까지 내놓은 것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25~28일 방중 기간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와 관련한 담판이 지연되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 접점을 찾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이었던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이번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빠진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2007년에는 여러 방면의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본질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취지에서 경제 쪽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본질적 문제’에서 매듭이 풀리다면 다른 이슈들에서도 접점을 찾아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는 ‘평화체제’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6·25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다자간 합의 시스템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한다.

남북과 미국, 중국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차 회담을 가동한 적도 있어 충분히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핵화 원칙에 합의하는 반대급부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확률이 높게 점쳐진다.

비핵화에 이어 평화체제 문제에서도 의미 있는 합의를 본다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 당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교류와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과 남북 경제 공동체 추진, 군사적 대립 행위 중단 등이 구체적 예다.

다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부차적 성격의 이런 의제들을 세부적 수준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남북 정상이 하루짜리 정상회담에서 모든 문제를 세세하게 논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 간 합의의 이행 상황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곡성 공장 직원 등 8만여명 직·간접 영향

금호타이어 운명 오늘 결판 법정관리 가면 청산 유력 지역경제·협값 매각 등 부담 자율협약 종료 연기 가능성도



금호타이어 노조가 29일 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방침 철회와 공개매각을 통한 국내기업의 인수 참여 기회 제공을 요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금호타이어 운명은 어디로 흘러갈까.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정한 ‘데드라인’은 30일이다. 이 때까지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입금 연장 등 유동성 대책을 소급해 무효화하겠다는 게 채권단 입장이었다.

〈법정관리로 가나?〉=노조가 ‘해외 매각 반대’ 방침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현재로서는 ‘법정관리’행이다.

이동걸 산업은행회장은 “유동성 문제 등으로 채권단 공동관리절차를 유지할 대안이 없는 만큼 외부자본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누차 강조해왔다.

업계에서는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되면 회사가 살아나기 쉽지 않다고 본다. 금호타이어의 계속기업가치(4600억원)는 정산 가치(1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실사 결과가 나와있는 상황이다.

당장, 수십년 동안 쌓아온 글로벌 브랜드 가치 훼손 및 국제 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시장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해 기존 영업망이 붕괴될 가능성도 커진다.

180여개 협력업체 뿐 아니라 자동차·금형 등 연관 산업에도 연쇄 충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블스타로 매각되나?〉=다른 시나리오 오는 노조가 막판 채권단 요구를 수용할 경우다. 이렇게 되면 ‘법정관리’행을 면하고 더블스타로의 경영권 이전이 본격화된다.

채권단은 이미 더블스타 투자유치 안에 대해 100% 동의로 승인한 상태다. 채권단은 노조가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한 노사 합의서와 해외 매각 동의서를 제출하면 더블스타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투자조건은 주당 5000원에 모두 646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더블스타는 3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채권단은 시설자금 용도로 최대 2000억원을 대출해줄기로 했다.

더블스타는 3년간 그리고 채권단은 5년간 지분 매각이 제한되고, 더블스타는 5년 또는 채권단이 지분 매각을 할 때까지 최대 주주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조건에 포함됐다.

다만, 지역 노동계를 중심으로 “더블스타가 5년 정도 버티다가 결국에는 지역기업 정부에 손실비를 메워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제2의 지엠사태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단 봉합?〉=마지막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채권단이 채무 상환 결정을 유예하는 방안이다. 이동걸 산은행장은 “유지할 수 없는 노사 합의 시한”이라며 30일을 못 박은 상태다. 최중구 금융위원장은 “노조가 해외 자본유치와 지구계획에 동의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없다”며 시한 연장 불가 방침을 확인했다. 변수는 남아있다. 우선, 산은이 대우조선 구조조정도 제대로 못한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인한 여파가 만만찮다. 또 성동조선을 법정관리 신청한 이후 금호타이어까지 법정관리로 갈 경우 감당

해야할 산업은행의 부담이 크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국내외 임직원만 1만129명에 달한다. 광주·곡성공장 직원들은 5000여명으로, 여기에 2·3차 협력업체 종사자 1만4000여명에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직·간접적으로 8만명에 달하는 고용 인원이 영향을 받게 된다.

협값 매각 논란도 감수해야 한다. 더블스타와의 매각 추진은 처음이 아니다. 산은 등 채권단은 지난해 1월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더블스타를 선정할 바 있다. 당시 더블스타는 인수대금으로 9550억원을 제시했다. 결국 당시보다 3000억원 낮은 금액에 경영권을 넘겨받게 되는 셈이다.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자율협약’ 종료시기를 다소 늦출 것이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최고위 공무원 평균 19억원...국회의원 85% 재산 늘어

문대통령 18억8000만원 취임 이후 5700만원 늘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보다 5700만원이 늘어난 18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해 10월1일 기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53명의 평균 재산은 14억9700만원이었다.

문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 8월 취임 후 첫 신고 당시 18억2200만원이었으나, 이

번 정기재산신고에서는 예금이 4억7700만원 가량 증가하고, 건물 가액이 약 3억원 감소하는 등 전체로 약 5700만원이 증가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8월보다 7300만원 증가한 5억7000만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보다 2억8300만원 늘어난 9억20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주요 기관장 등 최고위 공무원 29명의 본인과 가족 명의의 평균재산은 19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종전보다 2억1000여만원 늘어난 17억3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 박은규 산업부 장

관의 신고재산이 57억5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훈 국정원장(37억6000여만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35억8000여만원), 문무일 검찰총장(32억5000여만원) 등이 30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의원들의 경우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국회의원 287명 가운데 85.4%인 245명이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었다.

재산신고 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자유한국당 김세연·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1인당 재산 평균액은 22억8246만원이었다.

또 500억원 이상 3명을 제외한 정당별 1인당 평균 재산은 한국당이 29억8641만원

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바른미래당(25억8527만원), 민주평화당(17억7388만원), 민주당(17억1914만원), 정의당(5억2712만원) 등의 순이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지난해보다 7억1006만원 증가한 83억1412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지난해보다 16억7168만원 늘어난 67억6068만원을 신고했다. 이 재산 증가액은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반면 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3억664만원을 신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